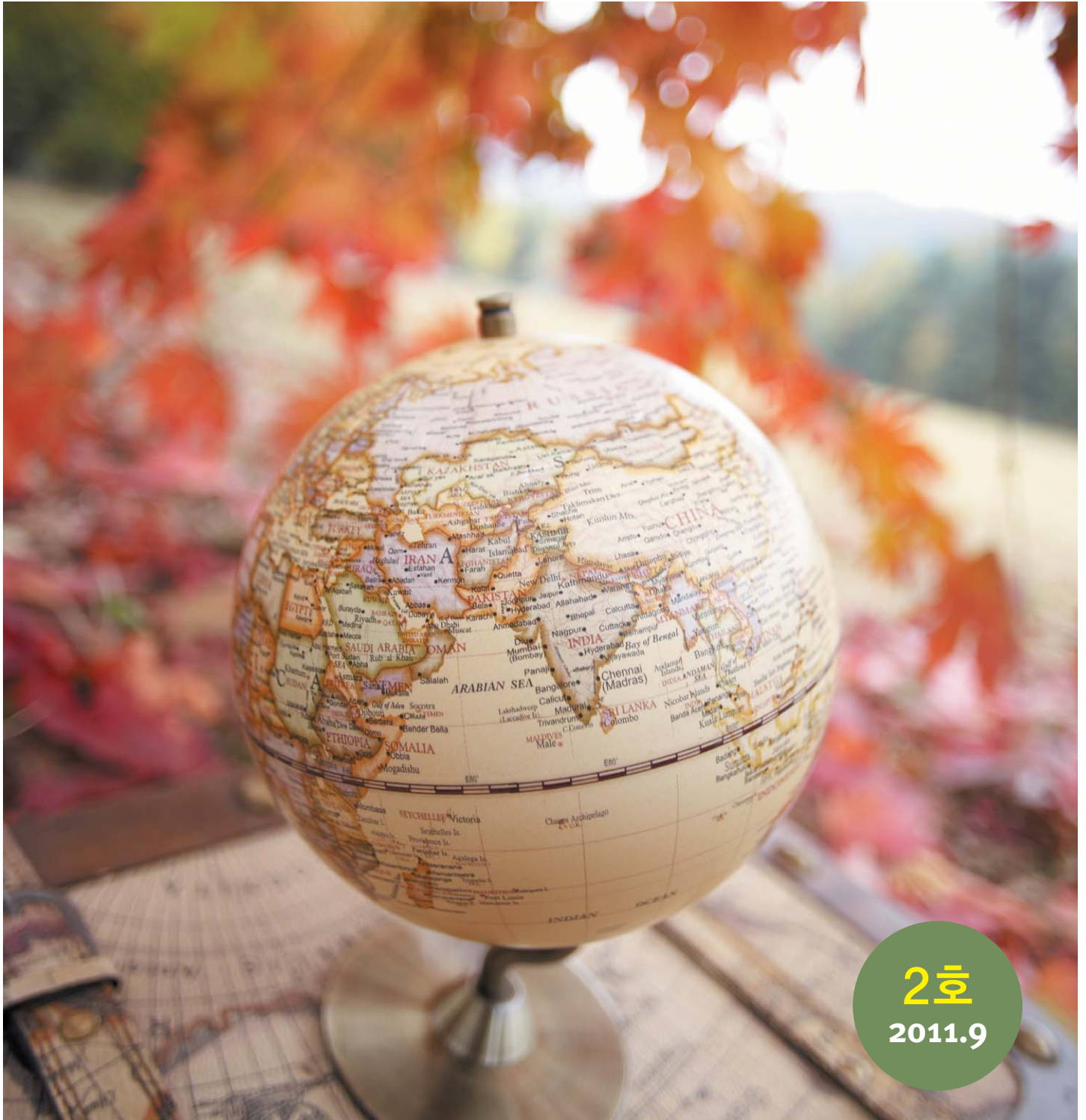


KoFID Newsletter



2호
2011.9

목 차 ▶▶

02 KoFID Newsletter 9월호

국제개발협력 주요 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프로그램(안)

04 KoFID 활동

05 KoFID 주제분과

칼럼 - 원조효과성 & 개발효과성 분과

KoFID 주제분과 활동보고

07 국제시민사회 소식

BetterAid 운영위원회

아시아 시민사회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기고문

08 부산총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

KoFID 정책 제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정책 제언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

일시 2011년 11월 26일 ~ 28일

장소 부산 그랜드호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www.betteraid.org

www.cso-effectiveness.org

www.kofi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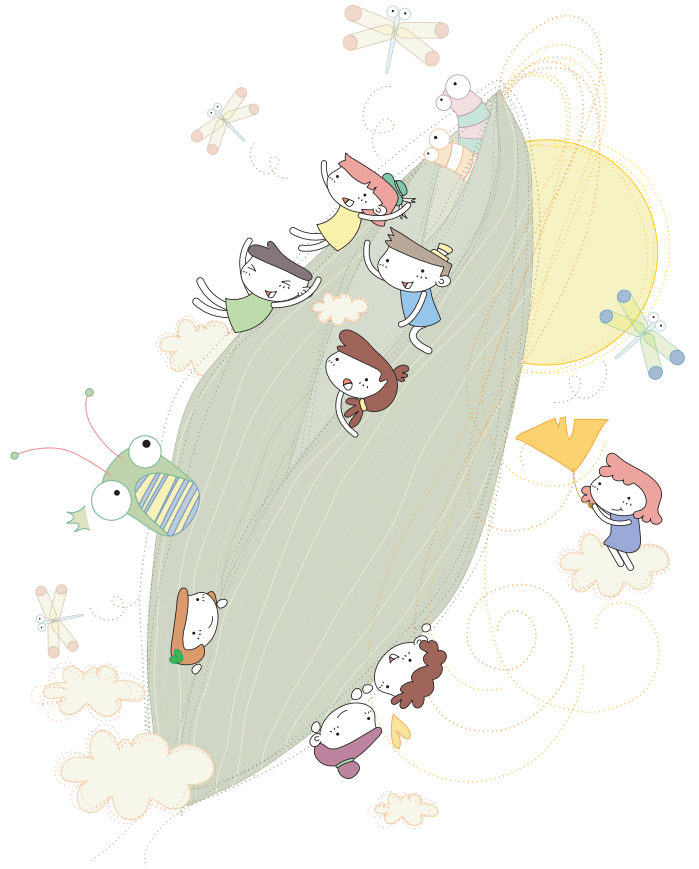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OECD HLF-4

일시 2011년 11월 29일 ~ 12월 1일

장소 부산 BEXCO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공식 홈페이지 www.busanhl4.org



KoFID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FID: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 29일 출범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BetterAid와 Open Forum에 한국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사전회의인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kofid.org

KoFID 회원단체 및 운영위원단체

회원단체 :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아시아재단 아시안브릿지 어린이재단 월드투게더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지구촌나눔운동 코피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운영위원단체 : 국제개발협력학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참여연대 한국월드비전 한국인권재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DA Watch

*** BetterAid**

원조와 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결성된 국제 네트워크인 BetterAid는 전 세계 7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OECD에서 시민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betteraid.org

***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Open Forum은 시민단체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08년에 결성되었고 지금까지 74개국 2000여 시민사회단체의 국가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5개 대륙에서 여러 차례 지역별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2009년 9월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홈페이지 : www.cso-effectiveness.org

〈국제개발협력 주요 일정〉 9월 · 10월

일시	장소	내용
9월 1-2일	서울,이화여대 /외교통상부	2011 Seoul Civil Society Forum on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KoFID, 아시아재단 주최)
9월 9-13일	캐나다, 몬트리올	CIVICUS 총회/ Open Forum GFG Task Team 회의/ BetterAid 운영위원회
9월 22-23일	서울	"Delivering Results through an Effective Public Sector" Joint Forum of Regional Communities of Practic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기재부, OECD 주최 / ADBs, 서울대학교 아시아개발연구소 주관)
9월 24일	서울, 참여연대	제2차 KoFID 종합 워크샵 (KoFID 주최)
9월 29일	서울, 워커히호텔	Workshop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 Growth and Aid (수출입은행 주최)
10월 4-5일	프랑스, 파리	BetterAid 운영위원회
10월 6-7일	프랑스, 파리	OECD DAC 원조효과작업반 총회
10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NGO Perspectives : Empowering Communities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굿네이버스 주최)
10월 13일	서울, 연세대	제5회 ODA Conference "Make Development Cooperation Effective" (KOICA 주최)
10월 14일	부산	KoFID - 부산시민연대 워크샵: 부산총회 관련 부산시민사회의 역할 (KoFID, 부산시민연대 주최)
10월 24일	서울	UNDP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제심포지움 "젠더, 원조효과성 및 지속가능한 개발 : 경제적인 변화를 위한 시너지 모색"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프로그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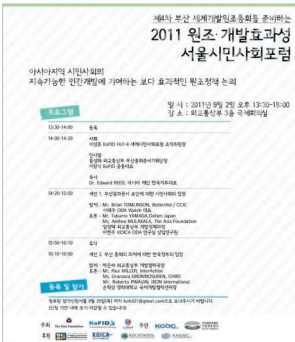
세션	11월 26일 (토) 1일	11월 27일 (일) 2일	11월 28일 (월) 3일
세션 1 8:30 - 10:15	개회식	분과회의 영역별 · 주제별 워크샵	분과회의 HLF-4의 구성요소와 병행 세션 워킹그룹
10:15 - 10:45	휴식	휴식	휴식
세션 2 10:45 - 12:30	전체회의 - 아크라부터 부산까지 국제 시민사회의 여정 - 부산결과문서 최종안 검토 및 협상과정 보고 - HLF-4 프로그램 소개	분과회의 계속	분과회의 계속
12:30 - 14:00	점심	점심	점심
세션 3 14:00 - 15:45	분과회의 영역별 · 주제별 워크샵 - 오리엔테이션(국내외 참가자) - 노동조합 · 여성단체 · 인권 등 워크샵	전체회의 - 영역별 · 주제별 워크샵 결과 보고 - 워킹그룹 의제와 진행 가이드라인 소개	분과회의 대륙별 모임
15:45 - 16:15	휴식	휴식	휴식
세션 4 16:15 - 18:00	분과회의 계속	분과회의 HLF-4의 구성요소 (Building Blocks)와 병행 세션 (Parallel Session)에 관한 워킹그룹	전체회의 -종합보고 및 향후 활동 계획 -폐회식
19:00 -	KoFID 주최 환영만찬		

2011 서울시민사회포럼

한국과 국제 시민사회, CSO 개발효과성에 관한 포럼

한국 정부와 부산총회 의제에 대한 정책 대화 가져

일시 2011년 9월 1-2일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LG 컨벤션홀 / 외교통상부 국제회의장



KoFID와 아시아재단은 9월 1~2일 양일에 걸쳐 2011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서울시민사회포럼(이하 서울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에는 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NGO협의체 (National NGO Platform) 대표들이 참가하여 부산총회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9월 1일 시민사회단체 대상 워크숍에서는 각국 개발 NGO 협의체가 모여 공동 대응전략과 CSO 개발효과성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사회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마련하기 위해 NGO협의체의 역할과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행된 9월 2일 공개 포럼은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에 기여하는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주제로 부산총회 결과문서 초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부산총회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듣는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 KoFID는 한

국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한국 정부에 10개 정책제언을 전달하였다.

본 포럼에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BetterAid, Open Forum, InterAction, Oxfam 등 다양한 NGO가 참여하였다. 시민사회 대표로 Brian Tomlinson(BetterAid)은 시민사회의 부산총회 준비 과정과 입장에 대해 발표하였다.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은 다양한 개발 행위자와의 협력이 개발협력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 시민사회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추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2011 서울시민사회포럼의 발제문과 토론문은 KoFID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 서울시민사회포럼 토론문 확인

한국 시민사회 부산총회 준비 본격화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되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한국 참석자 30인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300인이 초청되었다. 이들 대표자 300인은 부산총회에 앞서 열리는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에 참여하여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 전략을 세운다.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는 KoFID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10월 14일까지 KoFID 사무국에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 kofid21@gmail.com, 6월에 신청한 단체는 중복 신청할 필요 없음)

KoFID 주제분과

2011년 6월부터 KoFID는 CSO 개발효과성, 원조효과성 & 개발효과성, 인권과 개발, 젠더와 개발, 보건, 환경 등의 주제에 대한 분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에서는 개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와 한국 정부의 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KoFID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KoFID 주제분과 칼럼: 원조효과성 & 개발효과성 분과

‘개발효과성’의 맥락에서 ‘원조효과성’ 논의



김민영 지구촌나눔운동 팀장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OECD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이하 부산총회)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미래의 원조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치적 성과 중심이었던 ‘원조효과성’을 넘어서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효과성’을 소개하고, 개발효과성의 맥락에서 원조효과성을 논의하려고 한다.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에 대한 정의와 방법론은 시행 주체와 그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지구촌 빈곤퇴치를 원조 역할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점이 원조효과성이라면, 원조의 역할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사회개발의 관점을 추가해서 보다 확장되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원조, 개발의 효과성을 논의하려는 관점은 개발효과성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논의는 2005년 3월 파리에서 열린 제 2차 OECD 고위급회담 합의문인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에 기초를 두고 있다. 파리선언은 원조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개도국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성취될 수 있도록 원조의 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개혁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주인의식, 원조의 일치, 원조의 조화, 성과 중심의 관리, 상호책임)을 담고 있다.

부산총회를 준비하며 KoFID의 주제분과의 하나로 활동하고 있는 개발효과성 & 원조효과성 분과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접목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경험을 원조단체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사회의 변화와 발전과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하는 ‘한국의 개발경험’은 개발효과성의 맥락에서 원조효과성을 검토하는 새로운 관점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개발경험을 보다 객관화하여 세계와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

- ① 주인의식(Ownership) 개도국 스스로 자국의 개발정책 및 전략 수립에 리더십을 행사하고 개발원조를 주도
- ② 원조의 일치(Alignment) 공여국은 수원국의 국가 개발전략과 체계에 따라 개발원조를 제공
- ③ 원조의 조화(Harmonization) 공여국간 원조 활동을 서로 합의하여 중복된 원조 등으로 인한 비효율의 발생을 막음
- ④ 성과 중심의 관리(Managing for Results) 원조의 결과가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성장 등 실질적인 개발 성과로 나타나도록 함
- ⑤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가 개발성과에 책임을 가짐

* KoFID 뉴스레터는 매 호 주제분과 칼럼을 게재합니다. 9월호에는 원조효과성 & 개발효과성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김민영 지구촌나눔운동 팀장님께서 칼럼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 KoFID 주제분과 9월 활동보고

CSO 개발효과성 분과 개발협력의 주체로서 개도국에서 다양한 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인지제고를 위하여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원칙' 과 'CSO 개발효과성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조성(enabling environment)' 을 위한 소책자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참여단체: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월드비전, 월드투게더,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인권 분과 한국의 ODA 정책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 (RBA: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이 실현되도록 국제 인권 기준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 기업과 정부의 개발협력 활동에 RBA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여단체: 국제민주연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한국인권재단

원조효과성 & 개발효과성 분과 1950-70년대 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차관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인프라 건설 등의 경제 개발에 치중한 한국 정부의 ODA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적 평가와 대안적 시각을 제시한다.

참여단체: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아시안브릿지, 참여연대, 코피온, ODA Watch,

보건 분과 한국의 보건 ODA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한국 보건 ODA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고, 한국 정부의 보건 ODA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여단체: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월드비전

■ 국제시민사회 소식

부산으로의 여정 (Global Voices on the Road to Busan)

부산으로의 여정 1. BetterAid

BetterAid 운영위원회, 부산 세계시민사회 포럼 의제와 프로그램 논의



남수정 KoFID

9월 8일에서 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BetterAid 운영위원회(Coordinating Group, 이하 BACG)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에 관한 BetterAid의 입장을 논의하고 부산총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책을 마련하며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또한 9월 중에 발표될 부산총회 결과문서 2차 초안에 대한 BetterAid의 입장을 정리하고 각종 부대행사와 참여 방안 등에 관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부산총회 결과문서 2차 초안은 각국 정부·국제기구·CSO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가 제안한 구성요소(Building Blocks)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BetterAid는 인권에 기반한 개발협력(RBA)

과 CSO 개발효과성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조성(enabling environment)을 주요 구성요소로 제안하였다. 그 외에 Effective State(국가 시스템의 강화와 활용), SSC(South South Cooperation남남협력),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 Gender(젠더와 개발), Fragile State(취약국가) 등이 제안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이 포럼은 부산총회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전략 회의와 원조효과성 & 개발효과성 논의를 비롯한 주요 의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 워크숍 등으로 구성된다.

* 11월 26일 오후와 2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주제별·영역별 부대행사의 개최를 희망하는 단체는 10월 14일까지 KoFID 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으로의 여정 2. 아시아 시민사회

아시아 시민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부산총회 의제 논의

이경신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불과 2개월 남짓 앞두고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는 총회에서 다루어질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로 더욱 분주하다. 아태지역에서는 지난 8월 15~16일 양일에 걸쳐 “Promoting a Transformative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로 Reality of Aid Asia Pacific을 중심으로 하여 IBON International과 APRN이 공동 주관한 Regional Conference가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아태지역 시민사회 공동의 Advocacy 전략 수립을 위하여 부산총회 주요 이슈에 대한 남반구 시민사회의 이해를 증진하고, 현재의 개발 모델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분석된 자료를 살펴보는 자리였다.

논의의 결과는 “Asia Pacific CSO Statement on Development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아태지역 시민사회의 공동 성명서 내용에 담겨 있다. 성명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부산총회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의 주요 메시지인 CSOs on the Road to Busan에 담긴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재차 강조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개발을 위한 민간부문(기업)의 역할에 대하여, 기업의 민관협력은 이윤추구가 아닌 빈곤퇴치, 사회적 형평성, 환경 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에 적합한지를 살피는 부합성을 중시한다. 또한, 개발협력의 국제 기준에 따라 규범을 준수하고, 개발사업 이행의 전 과정에서 민주적인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민간부문으로 유입되는 ODA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생계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기후금융은 전통적인 원조의 흐름을 넘어서, 기후와 환경정의의 위한 매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적 생태 농업, 인권,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 틀 안에서 정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탄소 거래와 ODA 자금으로 운용되는 대규모의 바

이오 연료 생산을 포함한 시장 중심의 메커니즘에는 반대하며, 세계은행이 Green Climate Fund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남반구 중심의 민주적인 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남남협력은 남반구 주민의 참살이와 발전을 보장하고, 빈곤, 기아, 이주, 기후위기 등 남반구 공동의 이슈에 대한 협력을 우선시하며, 국제인권협약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남남협력에 대한 UN의 역할을 강화하고 남남협력의 일환으로 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 노력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기 세 가지 의제 중 개발에 대한 기업의 역할이나 남남협력은 KoFID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시민사회 성명서에도 담긴 내용으로, 부산총회를 준비하는 시민사회에게는 익숙한 의제이다. 이런 점과 비교하여 기후금융 의제는 부산총회를 넘어서 2012년에 개최될 Rio+20 회의에서 다루어질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요 의제를 염두에 둔 아태지역 시민사회의 사전 대응적 의도로 해석된다. 특별히 기후금융 의제는 한국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국가비전 17대 신성장동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녹색금융(Green Finance)을 포함시켜 금융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만큼 향후 한국 시민사회의 보다 면밀하고 비판적인 정책 감시 및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 정부의 2008년 1월 13일 신성장동력 추진전략 내용 중 녹색기술산업 6개, 첨단융합산업 6개, 고부가서비스 산업 5개가 포함되었으며, 이중 녹색금융은 고부가서비스 산업에 포함되어 있음

원문확인 아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공동 성명서

부산총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

KoFID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해원협)는 OECD 부산총회 결과문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을 발표하였다.

● 한국정부에 대한 KoFID의 요구사항

- ① 한국정부는 부산총회에서 '원조를 넘어서 개발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새로운 글로벌 개발 컴팩'을 채택하여 개발협력의 질과 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한국정부는 개발효과성 의제가 결과적으로 ODA의 축소와 민간재원으로의 대체가 아닌 글로벌 공공재로서 ODA가 더욱 확대되고 모든 개발재원이 지구촌 빈곤과 개발격차 해소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한국정부는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최빈국과 취약국 및 저소득국가의 MDGs 달성을 위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중점협력국과 지원분야 등 우선순위를 재점검하여야 한다.
- ④ 한국정부는 부산총회의 준비과정에서부터 모든 주요의제의 협상과정에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부산총회가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협력의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한국정부는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해 파리선언의 5대 원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개발협력의 투명성 제고와 성과관리, 분절화 방지와 책무성 증대를 위한 원조개혁 노력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 ⑥ 한국정부는 지구촌 극빈층의 빈곤탈출과 역량구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무역, 직접투자, 인프라 건설과 농업, 환경, 이민과 노동정책 등에서 개발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⑦ 한국정부는 부산총회에서 개발효과성을 측정, 모니터링, 평가 관리하기 위한 개발효과성 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고, 인권에 기반한 접근방법 및 개발영향평가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모든 개발협력사업에 인권과 젠더, 환경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개발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 ⑧ 한국정부는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 시민사회가 합의한 이스탄불 원칙이 부산총회 결과문건을 통해 공식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⑨ 한국정부는 부산총회가 OECD/DAC를 넘어서 다양한 Non-DAC 개발원조 제공자들과 G20, 유엔, 다자은행,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개발 파트너십과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데 적극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⑩ 한국정부는 부산총회가 한국 ODA의 질적 수준 제고와 효과성 증진 및 통합적 원조시스템 마련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포스트 부산 및 포스트 MDGs 체제를 적극 준비하여야 한다.

전문확인 KoFID 입장과 정책 제언

● 한국정부에 대한 해원협의 정책제안

- ① 한국정부는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과 아크라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이행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부산총회가 개도국 빈곤문제의 구조적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원조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② 한국정부는 부산총회를 파리선언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한국의 개발원조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③ 부산총회를 계기로 한국정부는 CSO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스탄불 원칙과 국제 프레임워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다른 국가 정부들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 ④ 한국정부는 CSO의 개발효과성 증진이 가능하도록 환경(enabling environment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을 조성하고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적으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⑤ 한국정부는 개발원조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크로스커팅 이슈인 인권, 성인지, 환경영향평가기준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⑥ 한국정부는 개발원조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원조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 ⑦ 한국정부는 파리원칙과 OECD DAC의 가이드라인과 권고안에 따라 원조 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유무상 통합, 원조 분절화 개선 및 조건부 원조를 폐지해야 한다.
- ⑧ 한국정부는 경제개발 중심의 지식공유프로그램(KSP) 내용에 한국의 민주화, 시민사회의 정책감시 및 사회개발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 ⑨ 한국정부는 민간협력(PPP)이 기업의 '개발'을 명분으로 이윤 추구를 합리화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 ⑩ 한국정부는 OECD DAC의 회원국이 되면서 수립한 ODA증액 계획을 일정대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개발협력재원의 다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전문확인 해원협 정책제안

홈페이지 www.ngokcoc.or.kr